

[발전노조 공식 입장문]

자랑스러운 발전노조 중부본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올해 3월초 탈퇴했다가 5월에 재가입했던 중부본부 조합원이 또 다시 탈퇴하면서 두 번째 입장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가 지난 3월에 이례적으로 전직원에게 발송한 탈퇴의 변에 대해 발전노조 집행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탈퇴의 변은 발전노조를 비난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그의 논리에 대한 발전노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첫째, 김○○은 발전노조 탈퇴와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추진의 가장 큰 이유로 지부장 징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합원들이 직접 손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조직 복원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전노조는 규약·규정과 지침을 어기면 절차에 따라 누구라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김○○의 논리대로라면 2002년 파업파괴자 지부장들에 대한 징계, 5대 위원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임 등이 모두 부당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보령과 신보령 지부장이 과거 조직 복원에 기울인 남다른 공로를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로가 있기에 조합의 지침을 거부하고, 지부장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태만히 해도 되는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령과 신보령 지부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두차례 중앙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그래도 함께 가자는 의견에 따라 중징계가 아닌 ‘경고’로 제67차 중앙위원회에 안건 상정한 것입니다. 회의 진행중에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당사자들은 경고 사유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징계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인천지부장과 서울지부장이 징계에 반대했다는 김○○의 주장은 사실 왜곡입니다)

둘째, 김○○은 여전히 중부발전의 성과연봉제 폐기 합의가 직권조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폐기 후속조치는 대부분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동일하며 직권조인 논란이 된 바 없으며, 노동관계 전문가들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직권조인 여부는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전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발의자가 안건을

철회하였습니다.(김○○은 전체 회의를 참관하면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중앙위원 전체의 의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김○○은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을 폄훼하여 전술노조(연합노조)의 실체를 왜곡하고 5년만의 쟁취한 호봉제 단체협약을 호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그 누구도 중부본부 동지들의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을 폄훼한 적이 없습니다. 연합노조의 실체를 어떻게 왜곡했다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중부발전에서 도입된 취업규칙 일방변경은 발전5개사를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 성과연봉제로 규정된 것과 내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김○○은 무슨 연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성과연봉제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 왔습니다. 작년 중부 단체협약에 호봉제라는 표현이 들어갔기에 ‘호봉제에 기반한 성과연봉제’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성과연봉제가 아니라는 논리는 상황을 호도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지난 7월의 중부발전 성과연봉제를 폐기했다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5개 기업노조의 설립을 비롯하여, 새롭게 노조를 만들겠다는 몸 담았던 발전노조를 부정했던 행위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발전노조가 몇몇 개인의 인공호흡에 기대어 왔다는 표현은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함께 했었던 발전노조 전체 조합원을 모욕하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거짓과 왜곡은 오래갈 수 없다는 진리를 믿으며, 우리는 조합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발전노조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2017년 12월 5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일동